

인구감소지역 예타 완화...전남 SOC사업 탄력 받나

경제성 낮추고 지역균형 평가 강화...16개 시·군 수혜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 등 혜택 가능성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평가 방식에서 경제성 비중을 낮추고 지역균형 평가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향후 전남 지역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사업은 예타 평가에서 경제성 가중치를 기존보다 5%p 낮추고 지역균형 평가 가중치를 5%

p 높인다.

지역균형 평가에서는 기존 지역낙후도 지표에 더해 '균형성장평가'를 신설해 지역 특수성과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정성적으로 반영한다.

대상 사업은 지난해 10월 말 이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며, 그 이전에 선정된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지방시대위원회가 2027년 도입 예정인 '균형성장영향평가' 결과도 예타와 연계해 활용하기로 했다. 일정 기준 이상 평가를 받은 사업은 예타 대상 선정과 심사 과정에서 우대받게 된다.

이번 제도 개편은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로 경제성 지표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비수도권 지역의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강진·고흥·곡성·구례·담양·보성·신안·영광·영암·완도·장성·장흥·진도·함평·해남·화순 등 16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한다. 도내 대부분 지역이 예타 평가 방식 개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교통과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대형 SOC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여자만 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 등이 혜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거론된다.

이 사업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1697억원을 투입해 해양 생물 보전과 생태·관광 기능을 갖춘 국가 해양생태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예타 평가에서 지역균형 요소가 강화되면 경제성 중심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생태·관광형 사업도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SOC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한다. 국비 기준 역시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1000억원 미만 사업은 중앙 예타 대신 주무 부처 자체 타당성 검토를 거쳐 추진할 수 있어 지방 사업 추진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알림

광남일보-월드비전이 함께하는
제8회 월드비전 꿈 엮서그리기대회

광남일보는 월드비전 광주전남사업본부와 함께 '우리가 함께 지키는 지구'라는 주제로 '제8회 월드비전 꿈 엮서그리기대회'를 개최합니다.

꿈 엮서그리기대회는 아이들이 기후 위기와 빈곤 등 세계의 문제를 배우고, 그림으로 공감과 희망을 표현하는 교육 캠페인입니다. 올해에는 아이들이 지구 환경을 이해하고,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지구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세계시민교육의 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 대회를 통해 아이들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배우고, 지구를 지키는 기후행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엽서를 제출하면 아프리카 친구들에게 연필이 선물로 전달되며, 수상작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됩니다. 아이들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세계 상황과 문제에 공감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를 바탕으로 지구촌 문제를 창의적이고 협력적으로 해결하는 삶을 제공하기 위한 대회에 광주·전남지역 초등학교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회명칭: 제8회 월드비전 꿈 엮서그리기대회
 △대회주제: 우리가 함께 지키는 지구
 △대회기간: 2026년 3월 2일~2026년 6월 12일
 △주최: 광남일보, 월드비전 광주전남사업본부
 △후원: 광주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
 △참여대상: 광주·전남지역 초등학교생 1~6학년
 △참여방법: 월드비전 광주전남사업본부 전화 신청 (062-372-2601)
 △심사기준: 주제 적합성, 창의성, 표현력, 작품 완성도
 △결과발표: 8월 20일 월드비전 꿈 엮서그리기대회 홈페이지



중동사태 비상경제 대책 TF 1차 점검회의.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이 10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중동사태 비상경제 대책 TF 1차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지선서 개헌 동시투표위해 17일까지 특위 구성을”

위원장 의장 “계엄 국회통제 강화·5·18·균형발전 정신 담자”

의원리 국회의장(사진)은 10일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며 “17일까지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각 정당에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선거일(6월 3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다음 달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20일 이상의 공고 후 60일 이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또 국민투표법상 국회를 통과한 개헌안은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

헌법에 규정된 이런 내용에 따라 역산하면 늦어도 다음 달 7일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으로 개헌의 문을 열자”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자동으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자는 데에 국민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였다”고 말했다.

또 “민주주의 헌법 정신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균형발전 정신을 (개헌안에) 포함할 것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권력구조 문제, 기본권, 연성헌법 등은 충분히 검토해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단계적 개헌으로 반드시 이번엔 개헌을 성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한꺼번에 하려다가 아무것도 못 하는 세월을 반복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합의되는 만큼’만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 수준을 중심으로 논의를 집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12·3(계엄)의 상처를 겪고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치의 책임 방기”라며 “여야 정당의 책임 있는 응답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개헌안 의결에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 데 대해서는 “국민투표법 통과 뒤 각 당 대표, 원내대표와 논의해 왔고 대부분 정당은 이 안에 동의하고, 국민의힘은 역시 좀 고민인 모양”이라며 “국민의힘 내에서 이 의제에 충분한 논의가 있을 거고 그런 점에서 보면 개헌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감사원 “무안공항 둔덕, 공사비 아끼려 설치”

제주항공 참사 요인 지목...8개 공항 14개, 검토 없이 조성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 구조물이 공사비 절감을 위해 면밀한 검토 없이 설치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0일 항공안전시설·정비·중사 인력·관계 등 4개 분야를 점검한 결과, 설계·문책 3건을 비롯한 30건의 지적 사항을 확인해 국토교통부 등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로컬라이저는 전파를 발사해 비행기 활주로 중심선 위치를 알려주는 항행안전시설이다.

착륙한 항공기의 손상을 줄이고자 착륙대 이후에 설치한 구역인 중단안전구역의 끝에 로컬라이저가 자리 잡는데, 전파 송신을 원활하게 하려면 활주로 최상단부보다 위치가 다소 높아야 한다.

그런데 무안공항 등 일부 지방공항은

활주로의 중단안전구역에 당초 지형에 가까운 경사가 남아 있었다. 토공사 물량을 줄여 공사비를 절감하려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활주로 최상단부보다 높게 로컬라이저를 위치시키려 기초 구조물을 만들어야 했고, 결과적으로 콘크리트 기초 및 둔덕을 조성하게 됐다.

특히 무안공항의 경우, 국토부가 2003년 6월 취약성 검토도 없이 콘크리트·둔덕을 설치하게 했는데, 2007년 한국공항공사(KAC)가 이에 대한 보완 요청을 했는데도 개선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국내 15개 공항의 36개 로컬라이저 기초구조물이 기준에 맞게 설치됐는지 점검한 결과, 무안공항 등 8개 공항의 14개 로컬라이저 구조물이 면밀한 검토 없이 철근 콘크리트 기초 등 부러지기

어려운 구조로 잘못 설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KAC는 2019~2024년 항행안전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안공항 등 5개 공항의 7개 로컬라이저 기초구조물에 대해 보강까지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무안공항 시공 담당자들은 아무런 검토 없이 콘크리트 보강을 구두 승인해 시공업체가 취약성(부러지기 쉬운 구조)이 확보되지 않은 시설을 설치하도록 부처했다.

또 국토부가 제주항공 참사 이후인 지난해 1월 로컬라이저 문제를 개선하는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해 진행했지만, 여수공항 등의 일부 경량철골 구조물은 전문가 검토 없이 개선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항공기 정비에서도 미비점이 확인됐다. 감사원이 최근 5년간 국제 항공사 항공기에 최다 장착된 한 모델 엔진의 고장도 없이 철근 콘크리트 기초 등 부러지기

사실 조사 여부를 점검한 결과 국토부는 2건만 조사를 하고 나머지 57건은 하지 않았다.

조종사·관제사 인력 운용에도 문제가 있었다.

최근 15년간 항공사고 가운데 조종사 과실이 49%로 비중이 가장 높고 조종사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의한 사고도 해외에서 반복되는데도, 국토부는 조종사·관제사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문진표만 제출받고 사실관계를 적절히 확인하지 않았다.

이밖에 동체착륙 등 비정상 상황에 대한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 운영도 부실했고, 영어 자격 관리·감독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또 감사원은 무안공항 등에서 조류 충돌 위험 평가 당시 충돌 가능성이 높은 조류를 다수 누락했으며, 일부 공항에서는 조종사에 필요한 조류활동정보를 송출한 사례가 전무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국회 정개특위서 ‘광주시의원 정수 확대’ 공감”

김문수 “전남의대 국립·공공 각 50명씩 순천·목포 배정” 촉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사진)은 “정개특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자치회 구성과 관련해 전남도 의원에 비해 현저히 적은 광주시의원 정수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출입 광주시지단과

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광주시의원 정수를 2배 이상 늘려 형평이 맞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우선 이번 지방선거에서 10명 정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기준 전남도의 인구수는 178만명인데 도의회 의원정수는 61명이다. 반면 광주시의 인구는 139만명인데 시

의회 의원정수는 23명이다.

전남은 광역의원이 2만9000명 당 1석인데, 광주는 6만명 1석 인 셈이다.

인구 당 광역의원 정수가 2배 가량 차이가 나 광주시의회에서는 광주 지역민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며 광역의원 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통합특별자치회가 출범하기 전에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한편으로 김 의원은 이날 열린 교육위원회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신설되는 전남의대에 정원 100명을 해주더라도 지역에 정착해야 의미가 있다. 50명은 그냥 국립의대로 해주고, 또 50명은 공공의대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재차 “순천과 목포는 생활권이 다르고 거리가 멀어 한쪽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며 “초광역 도시 통합의 의미를 살리고 자립 자생할 수 있는 의료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반드시 이 방향으로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